

최근 국제사회의 ODA 주요 논의사항

서 미 영 / 한국국제협력단 정책기획팀 대리

I. 서 문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빠른 변화 속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위기과제들도 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ODA를 둘러싼 이슈들은 보다 다각화되었다.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2008년 9월 아크라 고위급 포럼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큰 국제적 합의들로 원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 제13위라는 위상과 함께 신흥 리더 공여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원조는 세계유일의 독창적인 개발경험을 자산으로 국제 규범(Global Standard)을 준수하며 선진화를 추

진하고 있다. 계기는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8월에 개최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고, 지난 9월 29일에는 이를 위한 DAC의 특별검토가 실시되어 한국 원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규범, 즉 최근의 ODA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원조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최근 ODA 논의 중 한국에 시사점을 준만한 이슈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크게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ODA 규모 확대 노력, 둘째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혁동향, 마지막으로 ODA 분야의 다변화 동향이다.

II. 주요 동향

1. 보다 강화된 ODA 규모 확대 노력

가. 2015년 ODA 목표치 달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확대 촉구

2005년을 정점으로 '06-'07년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도 총 ODA 규모는 1,037억불로 2006년 1,044억불에 비해 0.67% 감소하였고, GNI 대비로 보면 2007년은 0.28%에 그쳐, 2006년 0.31%에 비하여도 꽤 하락한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201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GNI 대비 ODA 0.7%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우려하여 국제사회는 공여국들이 2005년에 설정한 ODA 목표수준(Timeline)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제62차 유엔총회(08.4)에서 OECD DAC 의장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4백억불의 ODA가 추가적으로 동원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9월에 개최된 UN MDGs 정상회의에서도 ODA 규모 확대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8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개발재원회의에서는 이것이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참고로 UN은 1970년 총회에서 공여국을 대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GNI 대비 0.7% 수준을 달

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후 오랜 동안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이 되어왔으며,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이 재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말 기준 이를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총 5개 국가에 불과하다.

나. 추가적 ODA 재원으로 혁신적 개발재원 확대 논의 활발

국제사회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현재 필요한 ODA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은 정부 재원 이외 추가적인 ODA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2002년에 개최된 제1차 '국제개발재원 회의'에서는 MDGs 달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서약을 담은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도출되었다. 이 컨센서스의 의의는 최초로 추가적 ODA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적 개발재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점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하 개발재원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으로는 '항공권 연대기여금'을 들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주도로 2006년 최초 추진된 대표적 혁신재원 메커니즘으로, 2007년 10월부터 한국도 일명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칠레, 사

이프러스 등이 도입하여 시행증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외 항권공에 대해 1천원씩을 부과함으로써 모금된 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 말라리아 · 결핵 퇴치를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현 논의중인(추진 포함) 혁신적 개발재원

① 항공권 연대기여금(프랑스 주도)

- 항공권에 소액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② 국제금융기금(IFF)(영국 주도)

- 공여국들의 지원공약에 기초하여 국제금융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 이를 원조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③ 개발을 위한 외환거래세

- 국제적 외환거래에 과세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④선시장공약(Advanced Market Commitments)(이탈리아 주도)

- 공여국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우선 약속하고 제약회사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의약품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

⑤ 기타 혁신적 개발재원

- 이민자 송금편의 제공(송금수수료 인하), 개발재원 특별인출권(SDR) 발행, 민관공동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발복권 등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매년 수원국 · 공여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총회는 주로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2006년 7월 제1차 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된 이래, 노르웨이(07.2월), 한국(07.9월), 세네갈(08.4월) 회의를 포함, 총 4차례의 회의가 매년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세네갈 회의에서는 항공세, 탄소배출권 거래, 혁신적 재원조달과 원조방향, 디지털 연대기여금, 불법자금 유입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 외화 거래세 및 민간분야의 개발에 대한 기여가 주로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혁신적 개발재원을 둘러싼 논의의 성격이 보다 진보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혁 동향

가. 신 원조체계(Aid Architecture)

: 유연한 포괄적 파트너십 강조

개발주체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개발주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DAC 회원국과 UN, 세계은행 등 주요 개발관련 국제기구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BRICs, 신흥공여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으로 그 범주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는 원조의 다양성을 위한 전통적 공여주체의 요구 노력에 대한 결과이면서도 국제적 개발레

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주체의 확산은 모든 개발주체 간의 유연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히 과거 수원국이었던 신흥공여국의 국제개발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은 대표적인 신흥공여국으로서 그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9월 제2차 non-DAC 회의 개최에 이어 금년 9월 아크라 회의에서는 신흥공여국 대표로 기초연설을 하는 등 전통적 공여국과 새로운 공여주체간의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에 가교역할로서 동참하고 있다.

나. 공여국간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을 통한 원조조화 도모

다양한 개발주체의 출범은 원조의 다양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원국과 원조 분야에 여러 공여국과 개발기구들의 중복적 참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조비용의 비효율성과 국제원조의 파편화(fragmentation)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켰다.

이 문제 해결책으로 국제사회가 최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이다. 원조분업은 EU 주도로 추진되는 일종의 원조수행 방식으로, 이를 통해 원조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개발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OECD/DAC 총 회원국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U는 2007년 이미 원조분업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채택하였다.

각 공여국의 비교우위를 전제로 수원국내 지원분야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각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여국의 수 또한 3-5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의 행동수칙은 현재는 유럽국가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EU는 꾸준히 이를 국제 개발영역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년 9월에 개최된 가나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서 EU는 이 행동수칙을 아크라 행동강령(AAA)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원조분업은 현 원조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아직은 개발주체간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는 원조의 중복 및 파편화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방식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원조조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 모색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강조

개도국 중에서도 특히 동티모르, 시에라레온 등과 같이 취약한 행정시스템, 안보 불안 등으로 절대빈곤이 만연한 국가들, 일명 취약국가(fragile states)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고조되었다. 아크라

고위급회의의 라운드테이블 1개 주제로 선정될 만큼 그 관심은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분쟁 및 취약 국가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신언에서 추구하는 원칙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치해 있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인 MDGs 달성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이와 같은 특별관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7년 4월 OECD DAC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국제 사회는 이들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의 초석을 마련 하기 위해 법정부적 접근방식(WGA) 도입을 논의 하였다. 개별 공여국의 노력보다는 일련의 공여국 들이 공동으로 원조분업을 통해서 ODA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OECD/DAC 산하에 설립된 거버넌스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방향을 논의하는 장인 민주 적 거버넌스 협의체(PDG)¹⁾에서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다자개발기구의 원조에 대한 공동평가 확대

공여국들은 원조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 자간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UN기구 및 국제개발금융기구들과 협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 강화로 다자

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보다 책임있는 집행 및 다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 워크(MOPAN)²⁾가 출범하였다. 캐나다, 영국을 중 심으로 총 11개 DAC 국가가 모여 출범시킨 MOPAN은 내년 3~4개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2007 년 12월부터 MOPAN 옵저버 회원국으로 스페인과 함께 참여 중이다. MOPAN의 평가 결과는 국별로 일부 상이하나, 주로 해당 다자기구에 대한 회원국 의 정책, 다자기구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강화 및 원조 효과성에 관한 토의에 주로 활용된다.

마. 성과중심의 원조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인식

수원국 및 공여국은 모두 원조성과를 보다 효과적 으로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수원국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가 주였다면, 최근에는 공여국내 인센티브 논 의가 새롭게 부상하였다. OECD/DAC 효과작업반 에서는 최근 영국 및 세계은행 지원하에 공여국을 대상으로 한 모범사례 및 자체평가도구로서 ‘공여

1) PDG(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는 조세, 감시, 금융, 정부조달 등 국가핵심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약한 민주주의 지향 국가들을 선진국, 다 자기구 등이 관련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 수행하는 OECD DAC 산하조직으로 2007년 10월에 출범하였고, 한국도 회원으로 현재 활동중임.

2) MOPAN(다자간성과평가네트워크: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은 총 11개 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로 매년 3~4개의 국제기구를 선정하여 효과성을 평가함. 한국은 '07.12월부터 현재 옵저버로 참여중

국내 원조효과성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s For Aid Effectiveness in Donor Agencies)'를 발간하여 9월 아크라회의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조직관리, 인력충원, 정책 및 절차, 예산증액 부문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급 차원의 정책선언 표명, 특별보너스 수당 지급 및 우수직원상 수여, 현장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 본부 및 현장 직원간의 정규적 이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강령과 같은 원조효과성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이 사업 수행시 일관되게 고려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워 주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바. 비구속적 원조(언타이드 원조) 확대

원조의 비구속화(untying aid)는 원조의 행정비용 감소 및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슈이다. 2001년 OECD/DAC는 '언타이드에 관한 권고'에서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확대를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에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화 비율은 '01년 79.9%에서 '06년 94.5%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권고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존 최빈개도국(LDC)에서 non-LDC HIPC(비최빈개도국 중 고채무빈곤국)로, 그리고 독립적 기술협력 및 식량원조까지도 언타이

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9월 아크라 고위급회의에서도 이 이슈가 다뤄져 non-LDC HIPC를 언타이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의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독립적 기술협력 및 식량원조의 대상 확대도 그리 멀지 않은 듯 하다.

언타이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원조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파리선언 5가지 원칙 중 2번째 원칙인 원조일치에서는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원조를 확대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조달시스템 이용이 수원국 현지시장의 경쟁력 및 생산력 강화, 개발과정에서 수원국 현지의 주인의식 강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달시스템 이용 실적 관련, 2006년 및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원국별로 격차가 심하나, 평균 39%에서 43%로 미미하나마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달성목표치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수원국의 시스템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사.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 다개년 계획 (multi-year programming frameworks) 수립

2007년 DAC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DAC

회원국 대부분은 개발재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에 관한 지출계획을 포함한 3~5년 단위의 다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러한 다개년 계획은 원조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신흥공여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서 ODA 중기재정은영 계획을 확정하는 등 원조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는 있다. 3년 주기 중기전략도 수립하였다. 다만 아직은 국별로 다개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시스템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 DAC의 Mandate 개혁 추진 (Reflection Exercise)

국제사회는 현재 새로운 DAC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개혁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흥공여국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으로 국제개발 레짐을 형성하는 주체들이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원조체계(Aid Architecture) 동향에 맞추어 개발 원조의 핵심 기구인 개발 원조위원회(DAC)도 금년도부터 'Reflection Group'을 구성하여 DAC의 역할, 구조 및 기능 등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중이다.

현재까지 DAC 개혁의 논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DAC가 비교우위를 갖는 핵심 활동(동료검토, 통계, 원조효과성 제고 등)을 기반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DAC의 relevance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되, DAC의 기본 정체성은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새로운 DAC가 UN 등 주요 국제개발기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어떻게 차별화시킬지가 주목된다.

3. ODA 관심 분야의 변화

가. 기초인프라 중심의 지원은 감소, 사회·행정인프라 지원은 증가

원조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인프라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흐름이 변하고 있다.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1986년 17.1%에서 2006년 11%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산업 및 생산 부문은 동기간 6.6%에서 1.9%로 감소한 반면, 사회인프라는 동기간 25.3%에서 32.4%로 증가하였다³⁾.

이는 2000년 MDGs 선언으로 빈곤감소, 보편적 교육, 아동 및 여성사망을 감소, 보건개신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이슈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개발주체들이 이 목표를 달성

3) OECD/DAC 통계 참조

하는데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MDGs의 분야 중 세부분야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 현상이다. 특히 MDGs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보건분야가 두드러진다. MDGs와 직결된 복표인 기초교육이나 전염병 퇴치 부문은 모든 공여국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로서 그 성과가 전반적으로 가시적이다. 그러나 반면 MDGs와 직접 연관성이 적은 고등교육, 기술교육, 기초보건과 같은 일부 분야는 그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이렇게 소외된 분야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다.

나. 전지구적 문제(글로벌 이슈)로 관심이슈 이동

전통적 MDGs 이슈 이외, 최근에는 거버넌스, 환경, 식수, 식량안보, 무역, 안보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기후변화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가 MDGs 달성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 식량위기

에너지 가격 및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최근 개

도국을 중심으로 식량위기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1970년대 이래 전세계 식량 재고량은 최저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렇다보니 개도국에서 기아 및 영양실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기존의 8억 5천명에 달하는 기아인구에 1억명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걱정거리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WFP는 최근 당초 계획된 식량지원사업을 위해 7억5천만불 규모의 긴급지원을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에 총 34개국으로부터 10억6천만불이 모금되면서 부족분을 다행히도 이미 초과달성한 상태이다. 또한 2008년 4월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식량위기대응을 위한 유엔 Task Force 설치를 발표하였고, 2008년 6월에는 '세계 식량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개별 국가의 노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미국(7억7천만불), 일본(1억불), EU(1억불) 등 신진공여국들도 연이어 긴급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도 WFP를 통해 약 2.5백만불 이상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원규모가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4) 이는 경제인프라 외 사회인프라 어느 쪽이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임.

■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논의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ODA 영역에 있어서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 개발과제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G-8 개발장관회의, 아크라 고위급회담 및 도하개발재원회의 등 주요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는 빠지지 않는 핵심 아젠다이다.

최근의 국제 기후변화 레짐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공동의 차별적 책임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 혁신적 재원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교토의정서에서 강조한 원조를 통한 청정개발체제(CDM) 및 탄소배출권(CERs) 사업을 추진하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⁵⁾.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노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합의된 전략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합의된 전략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기조를 소개하였다. 기후변화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녹색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이 2050년까지 범세계적으로 온실가스 50% 감축을 지지한다는 것과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자발적 증기 감축목표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제안하였다. KOICA는 5년간 추진되는 이 기후파트너십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KOICA 사업수행방식에 맞추어 향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확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쓰나미,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및 전쟁 등 인재로 인한 긴급재난은 물론 만성적 위기국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긴급지원 비중은 양자원조 중 '00년 6.6%, '02년 6.8%에서 '06년 8.9%로 급증하였다. 한국도 그 지원비중이 '02년 2.9백만불, '04년 12.9백만불, '06년 24.6백만불로 꾸준히 확

5)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 등 3기지를 국제사회의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대되었다.

규모의 확대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이 보다 선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2002년 2월에는 인도적 지원 총괄 조정을 위하여 유엔총회 결의로 유엔 인도적 구호활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무국(OCHA)이 설치되었다. 또한 CERF(중앙긴급대응기금), CAP(유엔 합동어필)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마련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신속성 제고 및 체계적 지원이 도모되고 있다. 한국은 CERF 기금으로 2007년 150만불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보다 증액된 2백만불을 지원하였다.

III. 결 론

선진화된 원조의 시작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한국 원조가 영세성과 고립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스스로가 글로벌 원조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제사회 또한 국제개발 논의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이슈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논

의가 아니다. 어떤 이슈들은 단순히 개발영역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우리와 동떨어진 국제사회에서나 논의하는 이슈들도 아니다. 모든 이슈들은 우리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꾸준히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0년 OECD DAC 가입을 앞두고 한국은 최근 다변화되는 ODA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원조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선진화된 ODA, 한국적 ODA가 그리 먼 일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